



VR로 복원한 돈의문 모습. /서울시

## ‘강제철거’ 돈의문, VR로 생생하게 복원

104년 만에 시민 품으로

1915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철거된 ‘돈의문’이 디지털 기술로 복원돼 104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

서울시는 ‘돈의문 디지털 복원 프로젝트’를 통해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로 복원한 돈의문을 일반에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일명 ‘서대문’이라고도 불리는 ‘돈의문’은 지난 1396년 만들어졌다. 1915년 일제강점기에 도로확장을 이유로 철거됐다. 조선시대 한양도성 서대문 중서쪽에 세워진 문이었지만 지금은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

돈의문은 교통난과 보상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실물 복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첨단 기술인 AR과 VR을 활용, 돈의문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돈의문 AR 체험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받아 정동사거리 주변에서 실행하면 100년 전 돈의문을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다.

AR 앱은 시간대에 따라 4가지 이상의 그래픽으로 구현된다. 정동사거리에는 돈의문 역사, 복원 과정, AR로 재현한 돈의문 모습을 보여주는 키오스크가 설치됐다.

시는 문화재청 자문위원인 김양직 명지대 교수, 단청 전문가 정병국 동국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의 철저한 고증과 시각 특수효과 전문가 등 참여로 복원 작업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전했다.

돈의문박물관마을에 3층 규모의 체험관을 마련해 돈의문 축소모형을 전시하고 VR존을 운영한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치매 환자 6만명 요양시설 정원 고작 1만명

치매 외래진료 고령자  
3년간 1만3477명 증가

노인요양시설 총 208개소  
공공 노인시설 16.3% 그쳐

서울에서 치매로 외래 진료를 받은 노인이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비율이 5%로 낮고 노인 인구 대비 공공 요양시설 수가 적어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 치매 외래 실수진자(통원 치료를 받은 사람) 수는 2017년 기준 총 6만6036명으로 집계됐다. 외래 서비스를 이용한 치매노인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노원구(3958명)였다. 이어 은평구(3733명), 강서구(3677명) 순이었다. 반면 중구(1112명), 종로구(1233명), 금천구(1476명)는 치매 외래 실수진자 수가 적었다.

서울에서 치매로 외래진료를 받은 고령자는 2014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

는 추세다. 2014년 5만2559명, 2015년 5만7940명, 2016년 6만1142명에서 2017년 6만6036명으로 3년간 1만3477명 증가했다.

치매환자는 늘어나는 데 이를 관리하는 서울시 지역사회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인 치매안심센터는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치매환자를 돌보는 노인요양 시설은 수요 대비 시설 수가 적었다.

서울연구원이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2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5%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비율인 30.6%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손창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은 “가족을 포함한 보호자가 있어 센터를 이용하기 쉬운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독거 노인, 자녀가 없는 어르신 등 사회적 지지와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치매 노인을 발굴해 치매 관리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시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은 총 208개소(정원 1만2671명)다. 이중 공공 노인요양시설은 34개소(정원 2877명)로 전체의 16.3%에 그친다. 노인요양시설 1개소당 서울시 치매노인 수는 평균 325.32명(2016년 기준)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 대비 요양시설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치구는 종로구, 중구, 서초구, 강남구, 마포구 등이었다.

손창우 연구위원은 “노인요양시설은 주거가 목적이기 때문에 산책이 가능한 오픈스페이스가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치구의 외곽 지역을 활용해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 연구위원은 “특히 공공시설의 요구가 높은 종로구와 중구는 도심권역 특성상 주변 지역을 활용해 공공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안으로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면서 노인요양시설 용도로 제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고덕강일지구 642세대 공공분양

SH공사, 내달 초 청약접수 시작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첫 번째 공공분양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SH공사는 4단지 분양주택 642세대에 대해 이날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다. 9월 초에 특별·일반분양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는 고덕동, 강일동, 상일동 구획으로 나뉘어 개발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다. 고덕동은 산업클러스터 육성 지역으로, 강일동과 상일동은 주거지역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분양하는 4단지는 강일동 지역에 속해 있다.

고덕강일지구 4단지는 SH공사가 고덕강일지구에서 공급하는 최초 분양단



고덕강일 4단지 조감도. /SH공사

지이다. 전용면적 49㎡, 59㎡로 구성된 분양주택 642세대와 국민임대·장기전세 597세대 등 총 1239세대다.

세대별 분양가격은 전용면적 59㎡의 경우 평균 4억6761만3000원이다. 최저 4억4004만원부터 최고 4억8775만원이다. 전용면적 49㎡는 평균 3억8810만원이다. 최저 3억6574만원부터 최고 4억507만원이다.

/김현정 기자

# 20년 후 서울을 만든다... ‘2040서울플랜’

20년 장기 목표 법정계획 수립  
4단계 거쳐 내년 말 최종확정

서울시는 향후 20년간 서울 도시계획의 밑그림이 될 ‘2040 서울플랜’ 수립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해 수립하는 20년 장기 목표의 법정계획이다. 서울의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도시계획으로 토지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서울시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된다.

이번 ‘2040 서울플랜’은 국토계획법상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14년에 세운 도시기본계획을 대체하는 것이다.

시는 ‘2040 서울플랜’에 시민 참여를

확대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생활권이 서울인 시민으로 참여 범위를 넓힌다.

참여 방식도 다양해진다. 서울시 홈페이지, 민주시의 서울, 엠보팅 같은 온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을 활용해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계획 수립 전반을 총괄하는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를 시장 직속으로 운영해 계획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인다.

시는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쳐 내년 말까지 ‘2040 서울플랜’을 최종 확정한다는 목표다. 1단계로 서울생활시민 100명+α가 참여하는 ‘시민계획단’을 구성하고 11월 말까지 2040년 서울의 미래상과 계획과제를 도출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달 30일까지 시민계획

단 100명을 모집한다.

2단계로 서울시와 시의회, 각 분야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전략계획과 부문별 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도시기본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작성(3단계)한다. 마지막으로 시민 의견을 반영해 법정절차를 거쳐 ‘2040 서울플랜’을 확정할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2040 서울플랜’은 상향식 계획문화를 시정 전반에 정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과 사회적 합의 기반하에 미래 서울이 나아가야 할 목표와 실천전략을 세워 2040년 서울의 한 단계 더 나은 도약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경기도, 무허가 축사 81% 합법 전환

내달 3823곳 중 3102곳 적법화 완료

경기지역 무허가 축사 5곳 중 4곳이 다음 달까지 합법적인 시설로 바뀐다.

경기도는 적법화 대상 경기지역 축사 3823곳 중 81.1%인 3102곳이 다음 달 27일 적법화 이행 기간 종료 전에 적법화를 완료한다고 20일 밝혔다.

축량 등 적법화 절차를 진행 중인 곳도 232곳(6.1%)이다.

나머지 489곳은 농장주의 고령화 등으로 폐업을 추진하거나 관광 중인 것

으로 파악됐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말 그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축사에 대해 위법사항을 확인해 없애고 정식 인허가를 받아 축사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허가받은 면적 외에 축사를 짓거나 규정된 분뇨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 무허가 축사가 난립하자 2013년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했다.

/수원=김승열 기자 kimsy@

## 서울시 “주민세 내달 2일까지 납부하세요”

송파구 15억 최대, 중구 3.4억 최저

올해 서울에서 주민세를 가장 많이 내는 자치구는 송파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7월 1일 기준으로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과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주민세(균등분) 총 446만건 728억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다.

주민세는 세대주·외국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

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납세의무자 유형별로 세대주·외국인은 371만건 222억원, 개인사업자는 45만건 278억원, 법인은 30만건 228억원이 부과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송파구가 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3억39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사업자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7억1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도

봉구가 5억10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법인 균등분 주민세 역시 법인이 가장 많은 강남구가 42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도봉구는 1억97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납세 편의를 위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8개 언어로 고지서 안내문을 제작해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는 11만8000건이 부과됐다. 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1만86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천구 1만7164건, 마포구 7217건 순이었다. /김현정 기자